

여연브리프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연구위원
옥승철 부연구위원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
-現 미디어 정책의 구조적 결함과 개선 방안-

2026년 4월 20일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

- 現 미디어 정책의 구조적 결함과 개선 방안 -

여의도연구원 트렌드 분석 및 빅데이터실 김장우 연구위원, 옥승철 부연구위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미디어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 만에 방송3법·방미통위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3대 입법이 모두 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으로 일방 처리됨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재편

□ 이재명 정부 미디어 정책 추진 현황

- 방송3법 공포·시행으로 KBS·MBC·EBS 이사회 확대 및 특별다수제 도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김종철 초대 위원장)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로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이재명 정부 미디어 정책의 핵심 문제점

-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 명분과 달리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 추천 주체가 친정권·친노조 인사로 채워질 수 있는 '편향 고착화 입법'이며, 인원 배분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자의적 운용 가능
- 방미통위는 7인 체제로 개편되었으나 야당 몫 상임위원 1석 공석으로 사실상 '여당 우위 6인 체제'로 운영되어 합의제 행정기관 본질 훼손
- 이재명 대통령의 종편 '편파 유튜브' 발언(2025.12.12) 및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종편 패널 교체 요구(2026.1.23.) 등 청와대의 노골적인 방송 내용 직접 개입
- 방미심위 위원 0명 상태가 5개월 이상(2025.10.1.~2026.3.12.) 지속되어 도박정보 6.7만건·디지털성범죄 1.4만건 등 16만 8천여 건 적체 및 방미심위 편향심의 의도

□ 정책대안

- 방송3법 후속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추천 주체별 인원 배분을 명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한 안정적 거버넌스 확보
- 방미통위 야당 몫 상임위원 즉시 임명을 통한 7인 체제 정상화와 주요 안건 가중다수결 요건 도입으로 합의제 본래 취지 회복
-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명확성·과잉금지·검열금지 원칙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청구
- 공영방송 재정 자립을 위한 수신료 산정·집행 분리 모델(영국 BBC식) 도입과 KBS 3년 누적 적자 1,800억 원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로드맵 수립
- 독일 ARD/ZDF, 영국 BBC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초당적 협의기구 신설 및 학계·시민 사회 참여 보장을 통한 독립적 방송 거버넌스 구축

□ 결론 및 시사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에 방송 3대 입법을 완료하였으나 모두 여당 단독·일방 처리 방식으로 진행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이는 정권 교체 시 동일한 방식의 역회귀를 초래할 구조적 위험 상존
- 미디어 정책의 성패는 입법 속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형성과 실효성 확보에 달려 있으며, 청와대의 방송 개입 차단과 방미심위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

1. 한국 미디어 정책 환경과 공영방송 현황

1.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역사적 맥락

□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¹⁾

○ 한국 공영방송의 구조적 한계²⁾

-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이 정치권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이 사실상 일괄 교체되는 관행이 반복되며 '5년 주기 방송 장악' 비판이 학계·시민사회에서 제기
- 최영재 한림대 교수(2020)는 한국 공영방송의 핵심 문제를 '정치적 후견주의 (political clientelism)'로 진단, 합의제·특별다수제 도입과 투명한 거버넌스 구성 절차를 제안한 바 있음
- 독일 ARD/ZDF의 사회 관련 집단 중심 방송위원회 모델과 영국 BBC의 통합 이사회+Ofcom 외부규제 체제가 학계의 주요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어 옴

○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논의³⁾

- 문재인 정부 출범(2017) 직후부터 언론노조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다원화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요구가 본격 제기
- 2017~2022년 기간 중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국회 통과에 이르지 못하고 계류
-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 일관되게 '방송 독립성 훼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 견지

□ 윤석열 정부 시기의 공영방송 인사와 그 효과⁴⁾

○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강행⁵⁾

- 윤석열 정부는 2024년 8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사장 임명 의결을 강행
- 2024년 8월 8일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의결,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효력정지 결정(사건번호 2024구합76591)
- 2025년 3월 26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 2025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고은설 부장판사)가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 배제

1) 최영재,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한국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한계와 개혁 방향」,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2020.

2) 최영재, 위의 글, 2020., 박종원,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한국언론정보학보, 2021.

3) 미디어오늘, "방송법 개정안, 22대 국회서 잇따라 발의", 2024.7.15.

4) 법률신문, "[결정]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26일까지 정지", 2024.8.8.

5) 조선일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법원에 또 발목 잡혔다", 2024.8.27.

○ 법원의 일관된 위법 판결⁶⁾

-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일관된 판단 견지
- 핵심 논거는 '재적 위원 5인 중 2인만으로는 과반수 찬성이라는 합의제 의결정족수 개념 자체가 성립 불가'라는 점
- 법원의 연속 위법 판결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공영방송 인사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 초래

2. 이재명 정부 출범과 미디어 정책 전환

□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의 미디어 정책 신호⁷⁾

○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즉각적 압박⁸⁾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 직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
-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2026년 8월) 보장을 주장하며 사퇴 거부, '사퇴 압박을 받아들이는 건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는 입장 표명
- 대통령실은 직접 사퇴 요구 대신 정부조직 개편(방통위 폐지)을 통한 '자동 면직' 방식 채택

○ 국정과제로의 언론개혁 배치⁹⁾

-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 발표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명시
- 123대 국정과제 중 미디어·언론 분야로 ①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②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구축, ③지역·중소언론 육성 등이 포함
- 국정기획위는 5년간(2026~2030) 미디어·언론 분야 재정투자 확대 방침 천명

□ 야당의 초기 대응과 한계¹⁰⁾

○ 국민의힘의 선제적 반대입장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방송3법 재추진 방침에 대해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장기 방송 장악 시나리오'라는 프레임으로 비판
- 22대 국회 의석 분포(민주당 160석+조국혁신당 12석+진보당 4석 vs 국민의힘 107석)상 입법 저지 수단이 사실상 필리버스터에 국한되는 한계 직면
-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 가능하므로 시간 지연 외 실질적 저지 효과 부재

6) 법률신문, 앞의 기사, 2024.8.8. 및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결정문(2024구합76591), 2024.8.26.

7) 한국기자협회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배석 제외", 2025.6.10.

8) 한국기자협회보, "이진숙 「사퇴 압박 받아들이는 건 부정에 대한 협력」", 2025.6.20.

9)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13.

10) 뉴시스, "국힘, 방송3법 강력 반대... 「문재인-이재명 장기 방송장악 시나리오」", 2025.7.8.

3. 한국 미디어·방송 산업의 구조적 위기

□ 방송산업 매출 현황 (2024년 기준)¹¹⁾

○ 전체 방송산업 2년 연속 역성장

-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방미통위, 2025년 12월 31일 발표) 결과 전체 방송사업매출 18조 8,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
- 2023년 -4.1%, 2024년 -0.7%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 지상파(DMB 포함) 매출 3조 5,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 전체 방송산업 내 비중이 IPTV(5조 783억 원)와 PP(7조 1,356억 원)에 밀려 3위로 추락
- 지상파 매출 비중은 2015년 25% 이상에서 2024년 18.8%로 지속 하락 추세

○ 광고매출 급감과 산업 기반 약화¹²⁾

- 2024년 전체 방송광고매출 2조 3,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
- 지상파 광고매출은 8,357억 원으로 9.9% 감소, 2015년 1조 9,112억 원 대비 10년간 절반 이하로 축소
- 방송광고 시장 내 지상파 점유율은 2014년 47.4%에서 2024년 23.7%로 반토막
- 디지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60%대를 점유하면서 방송광고 시장 자체가 구조적 축소 국면 진입

○ 지상파 3사 적자 경영 심화¹³⁾

- KBS는 2024년 사업적자 881억 원, 당기순손실 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악화
- 2022~2024년 3년간 KBS 누적 당기순손실 약 1,800억 원에 달함
- SBS도 2024년 영업손실 259억 원 기록, 지상파 3사 중 본사 기준 흑자 달성은 MBC 본사가 유일

□ OTT 시장 재편과 글로벌 플랫폼 종속 심화¹⁴⁾

○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압도

- 넷플릭스 월간활성이용자(MAU) 2025년 4월 기준 1,406만 1,673명(전년 동기 대비 +24.5%)
- 티빙(650만 명)·웨이브(403만 명) 합산 1,053만명을 크게 추월
- 앱 사용시간 점유율 기준 넷플릭스가 61.1%로 압도적 1위 차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2025.12.31.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의 보고서, 2025.12.3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2024 방송광고 시장 동향」, 2025.

13) KBS, 「2024년 감사보고서」, 2025.3. 한국기자협회보, "KBS, 3년 만에 균형예산... 통합징수 효과", 2025.12.30.

14) 전자신문, "넷플릭스 MAU 1,406만명... 토종 OTT 합산 추월", 2025.5.6.

○ 토종 OTT의 구조적 적자¹⁵⁾

- 2024년 매출 기준 넷플릭스코리아 8,997억 원(영업이익 173억 원·유일 흑자)
- 티빙 4,355억 원(영업적자 711억 원), 웨이브 3,313억 원(영업적자 189억 원) 등 토종 OTT는 누적 적자 지속
- 티빙-웨이브 합병이 2025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 착수, 토종 OTT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추진 중¹⁶⁾

□ 지상파 종사자 감소와 콘텐츠 수출 둔화¹⁷⁾

○ 종사자 수 지속 감소

- 2024년 방송산업 종사자 수 3만 7,427명으로 전년 대비 872명(2.3%) 감소
- 지상파 종사자가 4.5% 감소로 가장 큰 폭 축소,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 방송프로그램 수출 감소

- 2024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 6억 1,1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8.4% 감소
- 이 중 해외 OTT가 전체 수출의 71.3%를 차지, 글로벌 OTT 의존도가 콘텐츠 수출에서도 심화

1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티빙/콘텐츠웨이브 감사보고서", 2025.4.

16) 공정거래위원회,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심사 착수」 보도자료, 2025.3.28.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의 보고서, 2025.12.31.

II. 이재명 정부 미디어 정책 추진 현황

1. 방송3법 입법 경과와 핵심 조항

□ 방송3법 입법 타임라인¹⁸⁾

○ 2025년 8월 4~5일 방송법 본회의 통과¹⁹⁾

- 2025년 8월 4일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개시
- 민주당은 24시간 규칙에 따라 8월 5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표결 진행
- 2025년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180명, 찬성 178명, 반대 2명, 기권 0명
-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 사실상 여당 단독 처리

○ 8월 21일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²⁰⁾

- 필리버스터 종결 후 8월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171명,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
- 국민의힘 표결 불참, 반대 1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확인

○ 8월 22일 EBS법 본회의 통과²¹⁾

- 8월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180명,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0명
- 국민의힘 표결 불참, EBS법 반대 1표 역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 공포 및 시행²²⁾

-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2025년 8월 26일 방송3법 일괄 공포
- 법률 제21043호(방송법), 제21046호(방송문화진흥회법), 제21047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로 부여
- 공포 즉시 시행 원칙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효력 발생, 부칙에 따라 후속 시행령은 6개월 내 제정 의무

18) KBS, "방송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정청래호 1호 법안", 2025.8.5.

19) Ibid.

20) 중앙일보 "'EBS법'도 본회의 통과..."노조가 방송 장악" 우려 속 '방송3법' 개정 끝났다", 2025.8.21.

21) 조선일보, "野, 방송3법 본회의 강행 처리... 與 의원들 표결 불참 속 가결", 2025.8.2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법률 제21043호)」·「방송문화진흥회법(법률 제21046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 제21047호)」, 2025.8.26. 공포·시행.

□ 방송3법 핵심 조항: 이사회 확대와 추천 다원화²³⁾

○ KBS 이사회 확대 (11명 → 15명)

- 기존 KBS 이사회는 방통위 추천 11명(여당 7:야당 4 관행)으로 구성되어 정치권 추천 100% 구조
- 개정법은 이사 정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음과 같이 다원화:
 - ①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 ②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③ KBS 임직원 추천 3명, ④ 언론 관련 학회 추천 2명, ⑤ 변호사단체 추천 2명
- 국회 추천 비율이 기존 100%에서 40%로 축소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다원화
-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단체 추천 인사가 결과적으로 친언론노조·친정권 성향에 편중될 수 있는 구조

○ MBC 방문진 이사회 확대 (9명 → 13명)²⁴⁾

- 기존 방문진 이사 9명(여당 6:야당 3 관행)에서 13명으로 확대
- KBS와 유사하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MBC 임직원·학회·변호사단체 추천으로 다원화
- MBC는 방문진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구조이므로 방문진 이사회 구성 변경이 곧 MBC 사장 선임권 변화로 직결

○ EBS 이사회 확대 (9명 → 13명)

- 기존 EBS 이사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추천 주체 다원화 구조 동일 적용
- 교육 콘텐츠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계 인사 추천 비중 일부 보장

□ 사장 선임 절차의 근본적 변경²⁵⁾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

- 개정법에 따라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 의무
- 국민추천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군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제출
- 100명 이상이라는 대규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핵심 쟁점

○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이사회는 사장 선임 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동의(특별다수제)를 받아야 하며, 최종 단계에서는 결선투표제 적용
- KBS 15명 기준 9명 이상, MBC·EBS 13명 기준 8명 이상의 동의 필요

23) KBS, 앞의 기사, 2025.8.5., 중앙일보, 앞의 기사, 2025.8.21., 시사IN, "방송3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5.8.30.

24) 중앙일보, 앞의 기사, 2025.8.21., 조선일보, 앞의 기사, 2025.8.22.

25) KBS, 앞의 기사, 2025.8.5.,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48조의2, 2025.8.26.

- 특별다수제는 다수파의 일방적 사장 임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반대로 합의 도출 실패 시 사장 공백 장기화 우려

□ 편성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²⁶⁾

○ 편성위원회 의무 설치

-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함
- 편성위원회는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실상 노조의 편성권 공동 행사 보장
- 국민의힘은 '편성위원회가 사실상 친정권 편향 보도의 정당화 기구로 작동할 우려' 지속 제기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 KBS·MBC·EBS·YTN·연합뉴스TV의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주요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부문 직원의 과반 동의 필수
- 이는 사장이 임명한 보도책임자라 하더라도 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 자체가 무효화되는 강력한 견제 장치
- 국민의힘은 '소수 강성 노조가 보도 인사를 좌우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비판

26) 중앙일보, 앞의 기사, 2025.8.21., 조선일보, 앞의 기사, 2025.8.22.

2.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신설

□ 방통위 폐지의 정치적 배경²⁷⁾

○ 이진숙 위원장 체제 무력화의 우회 전략

- 이재명 정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2026년 8월)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식 채택
- 개정안 발의·통과·시행이 모두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례적 속도전
- 국민의힘은 이를 '이진숙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자 처분적 입법'이라 강력 비판

○ 정부조직 개편안의 발표와 처리²⁸⁾

- 2025년 9월 7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포함
-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PTV·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을 방미통위로 이관하여 방송미디어 정책 일원화

□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 경과²⁹⁾

○ 9월 27일 본회의 통과³⁰⁾

- 방미통위 설치법은 2025년 9월 27일 본회의 통과: 재석 177명, 찬성 176명, 반대 1명
-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재석 184명 만장일치로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
- 반대 1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으로 확인

○ 이진숙 위원장의 자동 면직과 헌법 소원³¹⁾

- 2025년 10월 1일 방미통위 설치법 공포·시행과 동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
- 이진숙은 면직 직후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입장 표명
- 이진숙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2025헌사936)했으나, 2026년 2월 13일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가처분 자진 취하

27) 조선일보, "與, 방통위 없었다... 최민희 "굿바이 이진숙" 환호", 2025.9.27.

28) 행정안전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도자료, 2025.9.7.

29) 조선일보, 위의 기사, 2025.9.27.

30) Ibid.

31) Ibid.

□ 방미통위 7인 체제와 운영 현황³²⁾

○ 위원 구성 구조

- 방미통위는 기존 상임 5인 체제에서 상임 3인 + 비상임 4인 = 총 7인 체제로 변경
- 추천 주체별 배분: 대통령 추천 2명(상임 1+비상임 1), 여당 추천 2명(상임 1+비상임 1), 야당 추천 3명(상임 1+비상임 2)
- 의결정족수는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초대 김종철 위원장 임명 경과³³⁾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
- 김종철 후보자는 헌법학자로 한국언론법학회·공법학회장을 역임한 미디어 법 전문가
- 2025년 12월 18일 김종철 위원장 공식 임명, 방미통위 출범(10월 1일) 이후 78일 만에 위원장 체제 가동
- 2025년 12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 거행

○ 위원 구성 현황 (2026년 4월 기준 6인 체제)³⁴⁾

추천 주체	성명	직위	배경
대통령	김종철	위원장(상임)	연세대 로스쿨 교수
대통령	류신환	비상임위원	변호사
여당(민주당)	고민수	상임위원	강원대 법전원 교수
여당(민주당)	윤성옥	비상임위원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야당(국민의힘)	이상근	비상임위원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야당(국민의힘)	최수영	비상임위원	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야당(국민의힘)	(공석)	상임위원	천영식 부결(2026.2.26)

○ 야당 몫 상임위원 천영식 후보자 부결

- 국민의힘은 2026년 2월경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
- 2026년 2월 26일 본회의 인사청문 표결에서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
-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야당 몫 상임위원 1석은 2026년 4월 현재까지 공석 상태로, 사실상 '여당 우위 6인 체제' 운영

32) 머니S,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위원장 취임...위원회 출범 80여일만", 2025.12.19.

33) 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2025.11.28, 머니S, 위의 기사, 2025.12.19.

34) 머니S, 위의 기사, 2025.12.19., 한겨레, "방미통위 야당 몫 상임위원 천영식 부결... 임명동의안 표결", 2026.2.26.

3. 법원의 연속 위법 판결과 그 함의

□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확인³⁵⁾

○ 법원의 5건 연속 위법 판결³⁶⁾

순번	판결일	주요 내용
1	2024년 8월 26일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정지 (2024구합76591)
2	2025년 4월 7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3	2025년 11월 28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
4	2026년 1월 22일	KBS 이사 7명 임명처분 취소
5	2026년 3월 26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처분 본안 취소

○ 법원의 일관된 법리

- 법원은 5건 모두에서 동일한 법리를 적용: '방통위 재적 위원 5명 중 2명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의결정족수에 미달'
- '의결에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요건은 최소 3인 이상 출석을 전제로 하며, 2인 체제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결여된다는 판단
- 이 법리는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KBS·MBC·EBS·YTN 모든 인사의 정당성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결과 초래

□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 포기 결정³⁷⁾

○ KBS 이사 임명취소 판결 후 즉각적 항소 포기

- 2026년 1월 22일 KBS 이사 7명 임명처분 취소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3일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
-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표명
- 임명 취소 대상 이사 7인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별도 항소장 제출, 항소심 진행 중

○ YTN 인수 승인 취소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³⁸⁾

- 2025년 11월 28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 판결 후, 2025년 12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
- 이로써 정부 측은 1심 판결을 수용, YTN 민영화 추진 자체가 원점으로 회귀
- 유진그룹은 별도 항소를 제기, '3,199억 원의 인수 대금 회수'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 지속

35) 중앙일보, "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2025.11.27.

36) 법률신문, 앞의 기사, 2024.8.8.,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5건., 미디어오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5건 연속 법원 판결로 무력화", 2026.3.27.

37)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 취소」 항소포기...「법원 판단 존중」", 2026.2.3.

38) 중앙일보, 위의 기사, 2025.11.27., 머니S, "「YTN 매각 승인 취소」 유진그룹, 인수 대금 받을 수 있나", 2025.12.1.

4. 공영방송 인사 변화

□ KBS: 박장범 사장 체제의 정당성 위기³⁹⁾

○ 박장범 사장 임명 경과⁴⁰⁾

- 박장범 사장(제27대)은 KBS 뉴스9 앵커 출신으로, 2024년 10월 23일 이사회 제청, 2024년 1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12월 10일 취임
- 박장범 사장을 선임한 KBS 13기 이사 7명의 임명이 2026년 1월 22일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그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림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3일부로 2021년 임명된 12기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복귀

○ 서기석 이사장 불신임 가결⁴¹⁾

- 2026년 3월 4일 KBS 이사회는 서기석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 참석 이사 10명 중 과반 찬성
- 서기석 이사장은 직위 상실, 새 이사장 체제에서 박장범 사장 해임 논의 본격화
-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사 임명을 취소했을 뿐 사장 임명 자체는 유효'라는 입장이나, 법원 판결의 파급효는 사장 정당성에까지 미친다는 해석이 다수

○ 김의철 전 사장 해임 취소 확정⁴²⁾

- 2025년 8월 21일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취하되어 해임 취소 최종 확정
- 이로써 김의철 전 사장은 부당해임 피해자로 공식 인정, 법적 복권

□ MBC: 안형준 사장 임기 만료와 방문진 재구성⁴³⁾

○ 안형준 사장 임기

- 안형준 사장은 2023년 2월 2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선임, 2023년 3월 17일 취임, 임기 3년으로 2026년 2~3월경 만료
- 재임 중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2025년 9~10월) 대응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2025년 12월 18일)
- 2026년 4월 현재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새 방문진 이사회 구성 완료 후 진행될 예정

39) 한국기자협회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임명...언론계 잇따라 비판", 2024.10.30.

40) Ibid.

41) KBS노동조합 성명서, "서기석 이사장 불신임 가결... KBS 정상화 첫걸음", 2026.3.5.

42) 한국기자협회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확정... 항소 취하", 2025.8.22.

43) 미디어오늘, "안형준 MBC 사장 임기 만료 임박... 새 방문진 구성에 시선", 2026.1.15.

○ 방문진 이사회 재편

- 현재 방문진 구성은 여권 3명·야권 6명(권태선 이사장 체제)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친야 성향 이사가 다수
- 방송3법 시행에 따른 새 방문진 13명 이사 구성이 완료되면 사실상 친정권 사장 임명 가능

□ EBS: 신동호 사장 임명 취소와 김유열 전 사장 복귀⁴⁴⁾

○ 신동호 사장 임명의 2단계 무력화⁴⁵⁾

-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2025년 3월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강행
- 2025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 배제
- 2026년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가 임명처분 본안 취소 판결
- 이로써 신동호 사장 임명은 절차적·실체적 양면에서 모두 무효 확정

○ 김유열 전 사장 복귀와 EBS 흑자 전환⁴⁶⁾

- 김유열 전 사장이 신동호 사장 직무배제 후 복귀하여 직무 수행 중
- EBS는 비상경영 체제에서도 2024년 16억원, 2025년 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
- 교육 콘텐츠 중심의 사업 모델 재정립과 비용 효율화가 흑자 전환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

□ YTN: 민영화 백지화와 재공영화 논의⁴⁷⁾

○ 유진그룹 인수 백지화 경과

- 2023년 유진이엔티(유진기업 51%+동양 49% 출자 SPC)가 한전KDN(21.43%)·한국마사회(9.52%) 보유 YTN 지분을 3,199억원에 인수, 총 30.95% 지분 확보
-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 방통위(2인 체제)가 최대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 2024년 2월 15일 잔금 납입 완료
- 2025년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승인처분 취소 판결
- 2025년 12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 지휘로 정부 측은 판결 수용

44) 채널A, "법원 「방통위 2인 체제서 결정한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2025.4.7.

45) Ibid.

46) 연합뉴스, "김유열 EBS 사장 "AI는 호재, 교육 콘텐츠에 과감히 실험"", 2026.3.15

47) 더퍼블릭, "법원, YTN 민영화 원점 되돌려...3000억 투자한 유진그룹 어떻게 되나?", 2025.11.28.

○ 재공영화 쟁점

- 언론노조 YTN 지부는 '유진그룹의 최대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고 YTN 정상화' 요구 중
- 재공영화의 핵심 쟁점은 ①유진그룹 투자금 3,199억 원 회수 문제, ②한전 KDN·마사회 지분 재매입 현실성, ③재정 부담 주체 등
- 국민의힘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민영화·재공영화를 오가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

5. 수신료 정책과 공영방송 재정

□ 수신료 분리징수 폐지와 통합징수 복귀⁴⁸⁾

○ 윤석열 정부 시기 분리징수의 결과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KBS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별도 징수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
- 분리징수 시행 이후 KBS는 연간 수신료 수입 약 335억 원 감소, 미납률 급증
- KBS 2024년 수신료 수입 6,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5억 원 감소 확인

○ 통합징수 복귀 입법 경과⁴⁹⁾

- 민주당은 2024년 12월 통합징수 복귀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 2025년 4월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212표로 가결,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거부권 무효화 사례
-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2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어 당내 이탈표 발생
- 2025년 10월 23일 시행, 2025년 11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월 2,500원) 합산 청구 재개

□ KBS의 재정 위기와 회복⁵⁰⁾

○ 2022~2024년 누적 적자

- KBS의 2024년 실적은 사업적자 881억 원, 당기순손실 7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악화
- 주요 수입 항목: 수신료 6,516억 원, 광고수입 1,677억 원(전년 대비 290억 원 감소), 콘텐츠판매수입 3,472억 원(308억 원 감소)
- 2022~2024년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약 1,800억 원 기록

48) KBS, 「2024년 감사보고서」, 2025.3., 한국기자협회보, "수신료 분리징수, 광고매출 급감...「KBS 소멸위기」", 2025.3.4.

49) 한국기자협회보,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재표결 끝에 통과", 2025.4.17.

50) 한국기자협회보, "KBS 2026년도 종합예산안 의결...3년 만의 균형예산", 2025.12.30. KBS 이사회 회의록(2025.12.29) 참조.

○ 2026년 균형예산 편성

- 통합징수 재개 효과로 KBS 2026년도 종합예산안은 수입 1조 3,645억 원, 비용 1조 3,641억 원, 당기순이익 4억 원의 3년 만의 균형예산으로 편성
- 2025년 12월 29일 이사회 의결, 이사 11명 중 8명 찬성
- 인건비 15% 절감 등 116억 원 자구안도 포함되었으나, 이사회 내에서 '실현 가능성 의문', '중장기 비전 부재'라는 지적 제기

□ 방미통위 2026년 예산⁵¹⁾

○ 총예산 2,631억 원 편성

- 방미통위 2026년 예산은 총 2,631억 원으로 확정
- 주요 항목: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예산 202억 원(전년 대비 2.5배 확대),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25억 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39억 원
- KBS 재난방송 지원 32억 원,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6억 원 증액
- 국민의힘은 '지역방송 지원 명분으로 친정권 매체에 자금을 흘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6.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⁵²⁾

○ 입법 경과⁵³⁾

-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2025년 10월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 개정안은 12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후 12월 24일 통과: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
- 반대 3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며, 기권 4표는 민주당 박주민,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2025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21305호),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

○ 핵심 처벌 조항⁵⁴⁾

-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 증명이 곤란한 손해에 대해 최대 5,000만원 법정손해액 산정 가능
-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사업자에 대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가능
- 대규모 플랫폼에 자율규제 의무 부과, 팩트체크 '투명성센터' 설립 조항 포함

51) 헤럴드경제, "방미통위 내년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방점", 2025.12.3.

52) 동아일보, "허위정보 손해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2025.12.24.

53) YTN, "국민의힘 "이 대통령,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해야"", 2025.12.25.

54) 한국경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 2025.12.24.

○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⁵⁵⁾

- 송언석 원내대표(2025.12.24): '명백한 위헌, 현재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최보윤 수석대변인: 민주당의 '신(新) 보도지침' 시도'
-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이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
-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여 정상적 비판 보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헌 논거 제시

□ 언론중재법 개정안⁵⁶⁾

○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2025년 11월 1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핵심 내용: ①악의적 인격권 침해 보도에 손해액 3배 범위 내 징벌적 배상, ②사실·칼럼에도 반론 보도 청구 가능, ③편집·취재 기록 제출 의무화
- 2025년 12월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2026년 초 처리 목표로 논의 진행 중

○ 국민의힘의 우려

- 광규택 수석대변인(2025.8.19): '실제 피해보다 몇 배 많은 배상을 강제해 비판 보도로 언론사·개인 유튜버를 폐업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 최형두 의원: '4년 전 UN 의사표현자유특별보고관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개정안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동일 법안의 재추진이라는 점에서 '5년 만의 부활'이라는 평가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편과 심의 공백

□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종료⁵⁷⁾

○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⁵⁸⁾

-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치 심의' 논란(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과 '민원 사주' 의혹(경찰 수사 중)에 휩싸인 채 2025년 4월 25일 건강상 사유로 사의 표명

55) 연합뉴스, "국힘 "위헌 확실한 날치기 입법...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2025.12.24.

56) 뉴데일리, "與, 입틀막 완결판 「언론중재법」 내년 초 개정... 「마지막 보루」 취재원 보호도 무너진다", 2025.12.26., 뉴스핌, "[오늘의 국회일정] 문체위 전체회의...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12.19)", 2025.12.18.

57) PD저널,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직서 재가...사의 표명 40일 만", 2025.6.4.

58) 시사저널, "「바이든-날리면」 보도 징계처분 무효...류희림 체제 제재 30건 모두 1심 패소", 2026.3.11.

- 사직서 수리는 2025년 6월 3일(대선 당일)로 사의 표명 40일 만에 이루어짐
-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법정제재 관련 1심 소송은 30건 모두 패소(30전 30패)로 기록

○ 류희림 체제의 사법적 무력화

- 법원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법정제재 결정 30건에 대해 모두 위법 또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취소 판결
- 주요 무력화 사례: '바이든-날리면' 보도 징계처분 무효, MBC '뉴스데스크' 관련 징계 다수 취소
- 류희림 체제는 사실상 '정치 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학계에서 제기

□ 방미심위 출범과 심의 공백 장기화⁵⁹⁾

○ 방미심위 신설

- 2025년 10월 1일 방심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신설
- 기존 방심위 위원이 불승계되어 위원 0명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 2026년 3월 초까지 심의 기능 정지
- 2026년 4월 14일, 이재명 대통령 한겨레 기자 출신 고광현 위원장 임명안 재가, 4월 16일, MBC 기자 출신 송요훈, 사무총장으로 발령⁶⁰⁾
- 고광현, 송요훈은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 소속⁶¹⁾

○ 심의 적체 현황⁶²⁾

- 2025년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안건 16만 8천여 건 적체
- 주요 적체 항목: 도박정보 6만 7,798건, 디지털성범죄 1만 4,731건, 캄보디아 유인 불법광고 등
- 이는 편향 보도에 대한 심의·제재 기능도 마비되었음을 의미하며, 시급한 사회적 위해 대응도 불가능함을 시사함
- 국민의힘은 '여당이 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

59) 경향신문, "방미심위 석 달째 「유령 기관」... 16만 8천건 적체", 2025.12.7. (데이터 기준일: 2025.10.2)

60) 미디어오늘, "[단독] 송요훈 전 MBC 기자, 방미심위 사무총장 발령", 2026.4.15.

61) Ibid.

62) 경향신문, 위의 기사, 2025.12.7.

Ⅲ. 이재명 정부 미디어 정책의 핵심 문제점

1. '공영방송 독립' 명분 뒤의 편향 고착화 구조

□ 추천 주체 다원화의 허상⁶³⁾

○ 추천 주체 구성의 친정권 편향성

- 방송3법은 외형적으로 국회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축소하고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단체 등을 추천 주체에 포함시켰음
- 시청자위원회는 사실상 친정권 시민단체 출신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임직원 추천은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
- 언론학회와 변호사단체 역시 특정 정치적 성향의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다원화'가 아니라 '편향 고착화'로 귀결될 우려

○ 국민의힘 측 비판⁶⁴⁾

-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2025.11.25):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에 넘기려 하고, 공정성 심사까지 없애 노골적 친정권 방송을 만들려 한다'
- 최형두 의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 강승규 의원: '민주당의 속내는 MBC를 계속 민주당 편향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

□ 시행령에 의한 자의적 운용 가능성⁶⁵⁾

○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인원 배분

- 방송3법은 추천 주체의 종류만 법률에 명시하고, 각 주체별 구체적 인원 배분과 운영 세부사항은 후속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개정 가능하므로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 운용 우려
-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언론학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 정권 교체 시 동일한 문제 재발 위험

- 이재명 정부가 시행령으로 친정권 추천 구조를 고착화할 경우, 차기 정권 교체 시 동일한 방식의 역회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 이는 공영방송의 '5년 주기 장악' 관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한 형태로 재생산하는 결과 초래

63) 시사IN, "방송3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5.8.30., 미디어오늘, "방송3법 개정 매듭...공영방송 지배구조 재편 돌입", 2025.8.27.

64) 뉴시스, "국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출범...「이재명 정권 언론통제 맞서 방파제 될 것」", 2025.11.25.

65) KBS, 앞의 기사, 2025.8.5., 시사IN, 앞의 기사, 2025.8.30.

□ 편성위원회와 임명동의제의 양면성⁶⁶⁾

○ 편성위원회의 사실상 노조 거부권화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는 외형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노조 측이 사용자 측 편성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 MBC 등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방송사에서는 편성위원회가 사실상 노조의 편성권 공동 행사 기구로 작동할 가능성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문제점

- 보도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사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
- 직원의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 반대 성향의 보도책임자는 사실상 임명 불가
- 이는 '편향의 자기 강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비판

2. 방미통위 운영의 절차적·실체적 문제

□ 야당 몫 상임위원 공석의 의도성⁶⁷⁾

○ 천영식 후보자 부결의 정치적 함의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6일 천영식 야당 몫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6표·반대 124표·기권 9표로 부결
- 부결 후 청와대는 새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2026년 4월 현재까지 야당 몫 상임위원 1석 공석 상태
- 이는 사실상 '여당 우위 6인 체제'로 방미통위를 운영하려는 의도라는 비판

○ 합의제 행정기관 본래 취지의 훼손

- 방미통위는 방통위의 후신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을 유지해야 하나, 현재 6인 체제(여당 4:야당 2)는 사실상 다수결 의결 가능
-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2인 체제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편향된 합의제' 문제

66) 중앙일보, 앞의 기사, 2025.8.21. 미디어오늘, 앞의 기사, 2025.8.27.

67) 문화일보, "국회 본회의장 여야 충돌, 여당 반대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안 국회 부결", 2026.2.26., 머니S, 앞의 기사, 2025.12.19.

□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개입 발언⁶⁸⁾

○ 종편 '편파 유튜브' 발언 (2025.12.12.)⁶⁹⁾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2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을 직접 겨냥한 발언
-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런 건 업무에 안 들어가나'
-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활동한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냐'
- 방미통위가 재승인 시 공정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그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추가 발언

○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비판 (2025.12.12.)⁷⁰⁾

-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겨냥해 「편파」 딱지를 붙이고 공개석상에서 문제 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방송 자유의 선을 넘는 것'
- '말을 잘 들으면 살고, 거슬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
- '방송 내용과 인허가 권한이 한 호흡으로 오간 대화는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에게 명백한 경고'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종편 패널 교체 발언 (2026.1.23)⁷¹⁾

○ JTBC 출연 중 직접적 개입 발언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1월 23일 JTBC 출연 중 종편 패널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발언
- '아주 일부의 종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 시사프로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배치해 운영하는 경향성이 있다'

○ 국민의힘의 강력 항의

-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노골적으로 패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오만한 행태... 명백한 방송법 위반'
- 이정현 전 홍보수석 벌금 1천만 원 선고 선례를 인용하며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경찰 즉각 수사 촉구
- 미디어연대는 '재승인·재허가를 암시한 발언은 직권남용이자 실질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 규정하며 즉각 사퇴와 청와대 공식 사과 요구

68) 조선일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종편 저격 나선李대통령", 2025.12.12.

69) 더퍼블릭, "'종편이 편파 유튜브?'... 국민의힘 「대통령의 공개 질책, 방송 자유 선 넘었다」", 2025.12.12.

70)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대통령의 '방송 공정성', 실상은 '방송 길들이기」 보도자료, 2025.12.12.

71) 한국NGO신문, "국민의힘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편성·패널 교체 요구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즉시 수사하라」", 2026.1.26.

3.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위헌 논란

□ 위헌 소지의 핵심 쟁점⁷²⁾

○ '허위조작정보' 정의의 모호성

-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로서 사회적 해악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모호
- 이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에 대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위반 소지
- 정상적 비판 보도와 허위조작정보의 경계가 모호하여 '광범위성(over-breadth)' 문제도 제기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우려

-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고배율
- 법정손해액 5,000만 원 산정은 입증 책임 완화로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부작용 유발
- 최대 10억 원 과징금은 중소 언론사·1인 미디어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

□ 국제기구 권고 및 미국 정부와의 충돌⁷³⁾

○ UN 의사표현자유특별보고관의 권고

- 2021년 UN 의사표현자유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유사 입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 인권 규범 위반' 우려 표명
- UN 권고의 핵심: ①허위정보 정의의 명확화, ②징벌적 손해배상의 비례성 확보, ③독립적 사법 심사 보장
- 이재명 정부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러한 권고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채 제정

○ 미국 정부의 우려 표명⁷⁴⁾

- 미국 국무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이 X(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은 규제 당국에 주관적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공개 비판
-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25년 12월 31일 공식 입장문에서 '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심각한 우려' 표명

72) 연합뉴스, 앞의 기사, 2025.12.24., 한국경제, 앞의 기사, 2025.12.24.

73) UN OHCHR 1차 자료: Irene Khan(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개서한 「Communication AL KOR 5/2021」, 2021.8.27.

74) 중앙일보, "[단독] 미국무부, 韓정통방법 저격 "검열권 우려...기술협력 위협", 2025.12.31.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도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의 글로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확산⁷⁵⁾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청구 가능성⁷⁶⁾

○ 국민의힘의 위헌 청구 의지

-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청구 추진 의지 천명
- 핵심 청구 논거: ①명확성 원칙 위반, ②과잉금지 원칙 위반, ③검열금지 원칙 위반
- 2026년 7월 7일 시행 이후 첫 처분 사례가 나오면 즉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예정

4. 방미심위 심의 공백의 심각성

□ 심의 공백 5개월 이상 지속의 함의⁷⁷⁾

○ 심의 공백의 직접적 피해

- 2025년 10월 1일 방심위 폐지 이후 2026년 3월까지 5개월 이상 방미심의 위원이 0명 상태로 심의 기능 완전 정지되었음
- 도박정보 6만 7,798건 적체로 사이버 도박 피해자 양산, 디지털성범죄 1만 4,731건 적체로 피해자 2차 가해 지속
- 캄보디아 유인 불법광고 등 시급한 국제적 사기 범죄 대응 불가

○ 심의 공백의 정치적 의도성

- 국민의힘은 '여당이 의도적으로 위원 임명을 지연시켜 방미심위 출범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
- 방미심위 위원 구성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시급한 사회적 위해 대응이 정치 도구화
- 이는 '방심위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심의 기능을 마비시켜 비판 보도에 대한 관용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

□ 심의 기준 혼란과 자의적 운용 우려

○ 새 심의 기준 미정

- 방미심위는 방심위의 권한을 승계하나, 새 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미공표
- 첫 심의가 시작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보도를 어떻게 제재할지 불투명
- 이는 향후 심의의 자의적 운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75) 뉴스스페이스, [빅테크칼럼] 미국, 한국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강력 제동..."검열 우려에 기술 협력 위협" 직격탄, 2026.1.2.

76) 연합뉴스, 앞의 기사, 2025.12.24. 송언석 원내대표 위헌법률심판 청구 의지 발언.

77) 경향신문, 앞의 기사, 2025.12.7.

IV. 정책 대안

1.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진정한 정치적 독립

□ 법률 차원의 추천 주체 인원 배분 명시

○ 시행령 위임의 한계 극복

- 현행 방송3법은 추천 주체의 종류만 법률로 정하고, 각 주체별 구체적 인원 배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구조
- 이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 운용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인원 배분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 필요
- 법률 개정 시 여야 합의를 의무화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안정적 운영 보장

○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 이사 추천 시 추천 주체와 후보자 간의 이해관계를 사전 신고·공개 의무화
- 특정 정치 성향 단체와의 명백한 연계가 있는 후보자는 추천 자체를 제한하는 객관적 기준 마련
- 추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청문회 절차 법제화

□ 공영방송 사장 임기제 개혁

○ 정권 임기와의 분리

- 현재 KBS·MBC 사장의 임기 3년이 사실상 정권 임기와 맞물려 5년 주기 교체로 귀결
- 사장 임기를 정권 임기와 의도적으로 어긋나도록 4년·6년 등으로 조정하여 정치적 영향 최소화
- BBC Director-General은 고정 5년제가 아니라 BBC 이사회가 정한 임명조건에 따르며, NHK 회장은 일본 방송법상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⁷⁸⁾

○ 사장 해임 사유 엄격화

- 현행 법률은 사장 해임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정치적 해임이 가능한 구조
- 해임 사유를 ①중대한 위법 행위, ②중대한 경영상 과실, ③명백한 직무유기 등으로 엄격 제한
- 해임 시 이사회 5분의 4 이상 동의 등 가중다수결 요건 도입

78) BBC Charter articles 25, 27, 29., Japan Broadcasting Act, Article 53.

2. 방미통위 운영의 정상화

□ 야당 몫 상임위원 즉시 임명

○ 7인 체제 정상화의 시급성

- 방미통위는 7인 체제(상임 3+비상임 4)로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1석이라도 공석이 지속되면 합의제 본질이 훼손
- 야당 몫 상임위원 1석 공석을 즉시 채우기 위해 새 후보자 추천과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
- 천영식 후보자 부결 사례를 교훈 삼아, 여야가 사전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관행 정착

○ 의결 요건의 합리화

- 현행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은 사실상 다수파의 일방 의결을 허용
- 주요 안건(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송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출석, 4인 이상 찬성 등 가중 요건 도입

□ 청와대의 방송 개입 차단

○ 방송법상 청와대 발언 제한

-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가 특정 방송사의 보도 내용·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
- 이재명 대통령의 '편파 유튜브' 발언, 이규연 수석의 '패널 교체' 발언 등이 사실상 방송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 위반 시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

○ 방미통위의 독립성 강화

- 방미통위 위원의 임기 보장과 신분 보장 강화
- 위원 해임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임 시 국회 동의 등 견제 장치 마련

3.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 위헌 청구의 법리적 근거

○ 명확성 원칙 위반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여 처벌 대상의 예측 가능성이 결여
-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에 대해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해 왔으며, 본 법은 이 기준에 미달

○ 과잉금지 원칙 위반

-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 동일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예: 정정보도 청구, 일반 손해배상)이 존재함에도 가장 침해적 수단 선택

○ 검열금지 원칙 위반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의무 부과는 사실상 사전 검열 효과
- 최대 10억 원 과징금 위협은 플랫폼이 정상적 비판 보도까지 차단하는 자기검열 효과 유발

4. 공영방송 재정 자립과 산업 구조개혁

□ 수신료 산정·집행 분리 모델

○ 수신료 산정의 독립성 확보

- 현재 수신료 인상은 방미동위 의결 후 국회 승인 절차를 거치므로 사실상 정치적 협상 대상
- 영국에서는 BBC 수신료 결정의 정치적 개입을 줄이기 위해, 독립적 외부기구가 수신료 수준을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제안·권고됨⁷⁹⁾
- 수신료위원회는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추천으로 구성하여 정치적 영향력 차단

○ 수신료 집행의 투명성 확보

- KBS의 수신료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의무 공개
- 수신료 집행 적정성 평가를 위한 독립 감사 의무화
- 수신료 인상 시 사용 계획서 사전 공개 및 공청회 의무 개최

□ KBS 구조개혁 로드맵 수립

○ 3년간 누적 적자 1,800억 원 해소

- KBS는 2022~2024년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약 1,800억 원으로 재정적 위기 직면
- 단기적으로는 통합징수 재개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나,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약화는 해소되지 않음
- 디지털 전환·OTT 시대에 대응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

○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KBS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수준) 및 글로벌 협업 강화
- AI 기반 콘텐츠 제작·번역 기술 도입으로 비용 효율화
- 지상파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콘텐츠 IP 수익 모델 다각화

79) The Communications (Television Licensing) (Amendment) Regulations 2025, Explanatory Memorandum.

5. 국제 표준 부합 거버넌스 구축

□ 초당적 협의기구 신설

○ 여야 동수 미디어개혁협의회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정쟁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여야 동수 협의기구 신설
- 협의회는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객관적 논의 보장
- 주요 안건은 협의회 합의를 거쳐 입법 추진하는 관행 정착

○ 학계·시민사회 참여 보장

- 미디어개혁협의회 산하에 학계 자문단(언론학·법학·정치학)과 시민사회 자문단(언론노조 외 다양한 시민단체) 구성
-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문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반영

□ 국제 표준의 적극적 도입⁸⁰⁾

○ 독일 ARD/ZDF 모델

- 독일 ARD/ZDF는 사회 관련 집단 대표(노조·교회·정당·학계 등) 중심의 방송위원회로 구성,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한 모범 사례
- 한국 공영방송에도 사회 관련 집단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 도입 검토

○ 영국 BBC 모델

- BBC는 통합이사회+Ofcom 외부규제 체제로 내부 자율성과 외부 견제의 균형 확보
- 한국에도 방미통위와 별도로 독립적 외부 규제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 핀란드·노르웨이 모델

- 북유럽 국가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
- 정부 임명이 아닌 의회 다수결+초당적 합의 모델 도입 검토

80) 한국언론진흥재단, “독일, 영국, 일본에서도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독립성”, 2025.9.26.
독일 ARD/ZDF의 Rundfunkrat 모델은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ZDF 판결 이후 정치권 위원 비율이 1/3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영국 BBC는 2017년 Royal Charter 개정에 따라 통합이사회와 Ofcom 외부규제 이원체제로 전환됨.

V. 결론 및 시사점

5대 핵심 제언

1. 방송3법 시행령 제정 시 추천 주체별 인원 배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개정 추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2. 방미통위 야당 몫 상임위원 즉시 임명을 통한 7인 체제 정상화, 합의제 행정기관 본래 취지 회복
3.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추진, 명확성·과잉금지·검열금지 원칙 위반 논거 제시
4. 공영방송 재정 자립을 위한 수신료 산정·집행 분리 모델 도입, KBS 산업 구조개혁 로드맵 수립
5. 국제 표준 부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의기구 신설, 학계·시민사회 참여 보장

□ 이재명 정부 미디어 정책의 종합적 평가

○ 입법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의 괴리

-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에 방송3법, 방미통위 설치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3대 입법을 모두 완료
- 그러나 모든 법안이 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여당 단독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결여
- 입법 속도는 빠르나 사회적 합의는 부재한 '속전속결식' 처리는 정권 교체 시 동일한 방식의 역회귀를 초래할 위험

○ '공영방송 독립' 명분과 실제 효과의 괴리

- 방송3법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구조는 '편향 고착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단체 등 추천 주체가 결과적으로 친정권·친언론 노조 인사로 채워질 수 있는 구조
- 이는 공영방송의 5년 주기 장악 관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형태로 재생산하는 결과

□ 핵심 위험 요인

○ 청와대의 방송 직접 개입

- 이재명 대통령의 '편파 유튜브' 발언, 이규연 수석의 '패널 교체' 발언 등 청와대의 방송 내용 개입이 노골화
-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인허가 권한과 결합된 사실상의 검열 효과
- 국제 언론자유 지표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

○ 방미심위 장악 및 표적·편향 심의

- 고광현·송요훈 등 좌편향 인사 구성을 통한 위원회 장악
- 향후 표적·편향 심의 다수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정책 성패의 3대 관건

○ 절차적 정당성 회복

- 입법의 속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성패의 핵심
- 여야 협의·시민사회 참여·학계 자문 등 정상적 절차를 통한 정책 추진 필요

○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

- 방미통위의 7인 체제 정상화, 야당 몫 상임위원 즉시 임명
- 청와대의 방송 개입을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 표준 부합

- 국제 언론자유 지표(RSF, Freedom House) 회복(2025년 기준 180개 중 61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⁸¹⁾
- UN·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 적극 수용

81) RSF(Reporters Without Borders), 「2025 World Press Freedom Index」, 2025.5.

참고문헌

- 경향신문, "방미심위 석 달째 「유령 기관」… 16만 8천건 적체", 2025.12.7.
- 공정거래위원회,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심사 착수」 보도자료, 2025.3.28.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법률 제21043호)」·「방송문화진흥회법(법률 제21046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 제21047호)」, 2025.8.26. 공포·시행.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대통령의 ‘방송 공정성’, 실상은 ‘방송 길들이기」」 보도자료, 2025.12.12.
-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티빙/콘텐츠웨이브 감사보고서", 2025.4.
- 뉴스스페이스, "[빅테크칼럼] 미국, 한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강력 제동…「검열 우려에 기술 협력 위협」 직격탄", 2026.1.2.
- 뉴스핌, "[오늘의 국회일정] 문체위 전체회의…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12.19)", 2025.12.18.
- 뉴데일리, "與, 입틀막 완결판 「언론중재법」 내년 초 개정…「마지막 보루」 추재원 보호도 무너진다", 2025.12.26.
- 뉴시스, "국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출범…「이재명 정권 언론통제 맞서 방파제 될 것」", 2025.11.25.
- 더퍼블릭, "법원, YTN 민영화 원점 되돌려…3000억 투자한 유진그룹 어떻게 되나?", 2025.11.28.
- 더퍼블릭, "「종편이 편파 유튜브?」… 국민의힘 「대통령의 공개 질책, 방송 자유 선 넘었다」", 2025.12.12.
- 동아일보, "MBC 방문진 이사 임명 급제동 이유는…결국 ‘2인 체제’에 발목", 2024.8.26.
- 동아일보, "방미통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여당 단독 강행에 야당 퇴장", 2025.9.27.
- 동아일보,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2025.11.28.
- 동아일보, "「허위정보 손배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2025.12.24.
- 머니S, "「YTN 매각 승인 취소」 유진그룹, 인수 대금 받을 수 있나", 2025.12.1.

- 머니S,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취임…위원회 출범 80여일만", 2025.12.19.
- 문화일보, "국회 본회의장 여야 충돌, 여당 반대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안 국회 부결", 2026.2.26.
- 미디어오늘, "[단독] 송요훈 전 MBC 기자, 방미심위 사무총장 발령", 2026.4.15.
- 미디어오늘, "방송법 개정안, 22대 국회서 잇따라 발의", 2024.7.15.
- 미디어오늘, "방송3법 개정 매듭…공영방송 지배구조 재편 돌입", 2025.8.27.
- 미디어오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5건 연속 법원 판결로 무력화", 2026.3.27.
- 미디어오늘, "안형준 MBC 사장 임기 만료 임박… 새 방문진 구성에 시선", 2026.1.15.
- 박종원,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한국언론정보학보」, 202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2025.12.31.
- 법률신문, "[결정]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26일까지 정지", 2024.8.8.
- 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2025.11.28.
- 시사IN, "방송3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5.8.30.
- 시사저널, "「바이든-날리면」 보도 징계처분 무효…류희림 체제 제재 30건 모두 1심 패소", 2026.3.11.
-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 취소」 항소포기…「법원 판단 존중」", 2026.2.3.
- 연합뉴스, "국힘 "위헌 확실한 날치기 입법…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2025.12.24.
- 연합뉴스, "김유열 EBS 사장 "AI는 호재, 교육 콘텐츠에 과감히 실험"", 2026.3.15.
- 전자신문, "넷플릭스 MAU 1,406만명… 토종 OTT 합산 추월", 2025.5.6.
- 조선일보, "'가짜뉴스 최대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통과... 野 「표현의 자유 침해」", 2025.12.24.
- 조선일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종편 저격 나선李大통령", 2025.12.12.

- 조선일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법원에 또 발목 잡혔다", 2024.8.27.
- 조선일보, "[속보] '이진숙 자동면직' 방미통위 설치법 국회 통과... 여당 단독 처리", 2025.9.27.
- 조선일보, "野, 방송3법 본회의 강행 처리... 與 의원들 표결 불참 속 가결", 2025.8.22.
- 중앙일보, "'EBS법'도 본회의 통과... '노조가 방송 장악' 우려 속 '방송3법' 개정 끝났다", 2025.8.21.
- 중앙일보, "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2025.11.27.
- 채널A, "법원 「방통위 2인 체제서 결정한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2025.4.7.
- 채널A,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권 '언론 장악' 반발", 2025.12.24.
- 최영재,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한국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한계와 개혁 방향」, 「언론과 법」 제19권 제3호, 2020.
- 한국경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가짜뉴스 최대 5배 손배", 2025.12.24.
- 한국기자협회보, "수신료 분리징수, 광고매출 급감...「KBS 소멸위기」", 2025.3.4.
- 한국기자협회보,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재표결 끝에 통과", 2025.4.17.
- 한국기자협회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임명...언론계 잇따라 비판", 2024.10.30.
- 한국기자협회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배석 제외", 2025.6.10.
- 한국기자협회보, "KBS 2026년도 종합예산안 의결...3년 만의 균형예산", 2025.12.30.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2024 방송광고 시장 동향」, 2025.
- 한국언론진흥재단, "독일, 영국, 일본에서도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독립성", 2025.9.26.
- 한국NGO신문, "국민의힘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편성·패널 교체 요구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즉시 수사하라」", 2026.1.26.
- 헤럴드경제, "방미통위 내년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방점", 2025.12.3.

- KBS, 「2024년 감사보고서」, 2025.3.
- KBS, "방송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정청래호 1호 법안”", 2025.8.5.
- PD저널,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직서 재가…사의 표명 40일 만", 2025.6.4.
- YTN, "국민의힘 "이 대통령,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해야"", 2025.12.25.
- BBC Charter, Articles 25, 27, 29.
-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5·2026」, 2025·2026.
- Japan Broadcasting Act, Article 53.
-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4」, 2024.6.
- RSF(Reporters Without Borders), 「2025 World Press Freedom Index」, 2025.5.
- The Communications (Television Licensing) (Amendment) Regulations 2025, Explanatory Memorandum.